

제2주제 : 국내외 사회적기업 사례로 본 성공요건

서성원 (사회적기업 지원 전북 네트워크 간사)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사회적기업의 지역화 전략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전북 네트워크 서 성 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년의 성과와 한계

○ 성과

- ▶ 2007년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244개), 예비사회적기업(763개 사업) 참여
-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관심 및 정책수립(조례제정 및 예산지원)
- ▶ 중앙부처 사회서비스 추진사업단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여
- ▶ 기업의 사회공헌사업(CSR)을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 참여 확대(교보, 한화, 삼성, SK 등)
- ▶ 시민·사회단체의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 참여 확대(지역운동, 환경, 복지, 교육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년의 성과와 한계

○ 한계

- ▶ 인증사회적기업의 사회적일자리 의존도 심화 및 지속가능성 전망 부재
(사회적일자리 지원 3+2에 따른 일자리 지원 종료 후 사회적기업의 생존문제)
- ▶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참여저조 및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미흡
(09년 들어 인증신청 급감 및 예비 사회적기업 모델발굴사업의 사회서비스 유형 한계)
- ▶ 유사 사업내용의 중복과 공급주체의 과잉으로 현장에서 경쟁 및 갈등요인 발생
(자활근로, 사회적일자리, 희망근로, 사회서비스, 노인 일자리 등)

문제의 진단

○ 주체의 문제

- ▶ 사회적기업에 대한 거품
사회적기업을 접근하는데 있어 이윤창출이라는 목적에 따라 경영기법이나 마케팅에 대한 접근은 강조되나 사회적경제 영역의 시장형성과 지역기반의 조직사업에 대한 노력 부족
- ▶ 사회적기업에 대한 박제화
사회적기업 본연의 가치(참여와 책임, 지역기반, 연대와 호혜)에 기초한 축적 방식과 연대적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개발 및 경영원리 부재
- ▶ 사회적기업에서 성장의 독점
사회적기업은 지역과 지역의 기반조직,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하나 자본이 축적방식처럼 독점적 지위와 규모화의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 존재

문제의 진단

○ 정책의 문제

▶ 취약한 기업 사회공헌의 공공성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의 필요가 아닌 정부와 민간간의 대화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인적자원 육성과 시장을 창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조화 될 필요가 있음

▶ 국가의 복지정책 구상의 빈약

국가의 복지정책에 대한 기본 구사이나 전달체계, 대상, 서비스 내용에 대한 구상이 빈약한 상황에서 민간위탁에 의한 사회서비스 확대 방안은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부족함을 대체하는 약역(?)으로 전략할 우려 있음.

▶ 정부의 종합적 설계 부족

중앙부처 차원의 사회서비스 영역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종합하고 집중할 수 있는 부처간(지방정부 포함)의 종합적 설계 미흡

▶ 정책 운용에서 지역과 사람의 누락

사회적기업의 근간이 지역인만큼 지역이 사회적기업을 보위하고 함께 성장 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주체형성과 이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지원 필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 전략 필요성

▶ 사회적기업과 지역의 연관성

지역은 사회적기업이 탄생하는 공간이자 사회적기업이 관계 맺는 대상이며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일종의 조건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

▶ 사회적기업의 생존조건인 지역 내 시장 확보 필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재화, 서비스)의 수요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고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은 지역주민의 수요와 조응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의 시장 형성 필요

▶ 사회적기업 지역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

사회적기업의 시행주체인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민간영역과 지방행정서비스의 주체인 지자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필요

사회적기업은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 자치단체 행정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사례 1 : 사회적기업 사람과 환경(자원재활용)

- ▶ 08년 12월 : 자원재생공사 사업전환에 따라 전주시 생활계 폐기물 수거 운반 책임 전주시 이관
- ▶ 04년 5월 : 전주덕진자활 자활근로사업 시작
(전주시 공동주택 생활계 폐기물 수거 운반)
- ▶ 07년 12월 : 사회적기업 사람과 환경 인증
- ▶ 08년 1월 : 전주시 생활계 폐기물 수거 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 조사(전주시 공동)
- ▶ 08년 3월 : 전주시 생활계 폐기물 수거 운반 민간위탁

시사점 :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전주시 청소행정업무 민간 분담
상호 신뢰를 전제한 민간위탁 비용 공동조사를 통한 전주시
재활용품 수거운반 위탁비용 절감
사회적기업의 지자체 사업 민간위탁을 통한 안정적 시장 창출
민·관 협력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모색(소형가전, 유해성 폐
기물 등)

사회적기업은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 자치단체 행정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사례 2 : 사회적기업 나눔푸드(로컬푸드)

- ▶ 03년 2월 : 출장뷔페, 유과제조 사업을 중심으로 자활근로사업 시작
(진안자활센터)
- ▶ 07년 9월 : 자활공동체 나눔푸드 설립
- ▶ 07년 9월 : SK 행복나눔재단 행복도시락센터 진안점 개소
진안 관내 320가구 및 지역아동센터 (10곳) 급식 공급
- ▶ 08년 7월 : 사회적기업 나눔푸드 인증
- ▶ 09년 1월 : 도시락 급식에 필요한 농산물 생산 가공사업 시작
식자재 구입비용 1억5천만원의 50% 지역 농산물 구매

시사점 : 공공급식 민간위탁을 통한 SK 행복도시락 사업 지역
유치 (1억5천만원 시설비 및 일자리 창출)
지역농산물의 구매·가공사업을 통한 지역농가 소득창출
및 일자리 확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사업기반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지원 현황

- ▶ 구체적 목표 제시 : 향후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
- ▶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사업 계획 : 지역적합형 사회적기업 모델수립 조사, 예비사회적기업 실태조사
- ▶ 사회적기업 홍보 방안 : 도청 홈페이지 홍보, 관련 실무자 교육 및 포상, 언론 홍보
- ▶ 사회적기업 경영 지원 방안 :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통한 지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통한 지원, 도 지정금고의 사회적기업 지원 참여, 지방정부 예산의 의한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경비 지원
- ▶ 우선구매 및 판로개척 방안 : 사회서비스 분야의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 공공계약 추진, 사회적기업 제품 또는 서비스의 우선구매 확대
- ▶ 지역 네트워크 강화 : 1사 1사회적기업 사회공헌 결연사업, 사회적기업 지원 민·관 네트워크 구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협의체 구성
- ▶ 지자체 지원체계 구축 : 사회적기업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 ▶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육성 :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명기

전라북도의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

- ▶ 사회적기업 전담 부서 설치
사회서비스 사업 담당(07년 8월)에서 사회적기업 담당(09년 5월)으로 변경
- ▶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제정(09년 7월 3일 공표)
사회적기업 지원 민·관 실무위원회 구성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치
우선구매, 업무위탁 지원에 대한 의무조항
-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예산 확보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을 위한 예산 (09년 추경 2억)
- ▶ 사회적기업 지원 민·관 협력체제 구축
07년 5월 사회적기업 지원 전북 네트워크 출범 이후 상시 논의구조 운영

지자체 지원제도의 문제점

- ▶ 지방비 부족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조례에 근거한 실질적 지원 어려움.
- ▶ 전문인력 부족
사회적기업을 이해하는 공무원 부족, 민간 영역에서도 전문가 부족
- ▶ 사회적기업 전담부서 미비
지자체마다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가 다르고 총괄 전담하기 위한 부서 미흡
- ▶ 전망의 불투명
주체들의 사회적기업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고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 ▶ 지자체 사회적기업 전담부서 설치
사회적기업의 각 사업영역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업무와 협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부서의 육성협의체 참여
- ▶ 사회적기업 관련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기업 유관사업(자활,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장애인 일자리)과 민간 지원 자원(노무, 회계, 경영 등), 교육기관 및 대학, 언론, 지역 정치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적기업의 공공성 확대라는 조직의 정체성 명료화
- ▶ 사회적기업 지원 민·관 협의기구 상설화 및 지원센터 설치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을 내실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실무는 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치 필요
- ▶ 민·관 공동의 사회적기업 욕구조사 및 지역사회 수요조사
민·관 공동 현장방문을 통하여 업종 및 유형별, 기능별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의 사회서비스 욕구파악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성 및 업종별 사회적기업 육성전략 수립이 필요

업종별 사회적기업 지역화 전략

○ 돌봄서비스 영역

- ▶ 지역 내 돌봄서비스 수요 공급 조사를 통한 일자리 안정화
- ▶ 돌봄서비스사업의 영리업체 개방에 대비 비영리 블록 구축

○ 재활용사업 영역

- ▶ 재활용품 집적과 2, 3차 처리공정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 소형가전, 유해성폐기물 등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 주거복지 영역

- ▶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을 통한 집수리 신규사업 영역 개발
- ▶ 분산 시행 되는 주거복지사업의 집중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 로컬푸드사업 영역

- ▶ 지역아동센터 영·유아보육센터, 사회복지 유관 공공급식시설, 기업체 식당의 수요파악을 통한 로컬푸드 시장 개척
- ▶ 지역생협과 연계한 지역농산물의 판매시장 확보

업종별 사회적기업 지역화 전략

○ 청소사업 영역

- ▶ 학교청소사업 예산의 공식화를 통한 일자리 안정화

○ 문화·예술영역

- ▶ 문화 바우처, 사랑의 티켓 사업의 지역공연 할당제 도입
- ▶ 영·유아 보육시설, 방과후 공부방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강사 파견
- ▶ 영역별 공연사업단의 통합 콘텐츠 개발

○ 영·유아 보육 및 지역아동센터 사업영역

- ▶ 인력수요처(영유아보육협회, 지역아동센터협회 등)와 공급기관간의 협력을 통한 파견인력의 수요 공급 공식화 및 안정화
- ▶ 급식을 매개로 지역 로컬푸드 사업과 연계방안 모색

사회적기업 접근의 발상을 전환하자.

- ▶ 지방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함에 있어 노동부나 행자부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사회적기업을 피해해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대안, 사회적 배제 완화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유의미한 대안의 하나로 인식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
- ▶ 사회적기업의 주체인 시민사회단체는
 - ▶ 첫째. 지역으로부터의 신뢰확보를 전제로 취약한 인적 물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 둘째. 사회적기업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중심에 놓지 않고 지역의 주체들이 상호 연대할 수 있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 셋째. 사회적기업은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 넷째. 사회적기업가들은 혁신적 자세가 필요하다.